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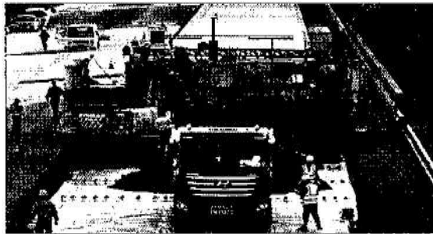
◇삼우아이엠씨의 핵심 기술인 M-CRCP(자동배근연속철근콘크리트포장) 공법 시연 장면. M-CRCP 기술은 철근을 정위치에 설치함으로써 품질이 확보되고,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 단축 및 인력이 절감돼 경제성이 뛰어나다.

# 토목 분야 ‘히든 챔피언’

## (주)삼우아이엠씨

‘히든 챔피언’은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강소(強小)기업을 뜻한다.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출발해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주)삼우아이엠씨는 국내 토목 분야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이다.

■ “도로 곳곳에 우리의 땀과 기술 배었다”=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8공구인 흥천군 내촌면 물걸리의 한 교량. 이곳은 교량의 바닥 슬래브 위에 두께 5cm 안팎의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LMC)를 바로 포설해 마무리하는 ‘LMC교면 포장공법’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기술과는 달리 20년 이상 별도 유지관리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삼우아이엠씨 직원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곳곳에



◇고속국도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제4공구인 동해시 새운동 터널 내 4,037m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 중인 장면.

포장공사 주력 연매출 400억 성장  
수평적 기업 문화·산학협력 강점

삼우아이엠씨의 땀방울이 맺혀 있다.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2003년 설립된 회사는 연매출 규모 300억~400억원대, 직원 수 80여명으로 포장공사업·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주력산업이다.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특허만 61개, 상표권 9개, 디자인등록 1개, 녹색기술인증

1개, 건설신기술 4개 등이다.

■ 회사는 기술력, 직원은 실력으로 승부=삼우아이엠씨가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비결은 무엇일까. 삼우아이엠씨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기획실, 마케팅, 유지보수, 신설 포장 등 8개 부서가 동근 원을 이룬 구조다.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향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와 기업문화를 갖췄다. 또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기 쉬운 대학, 연구소와의 산학협력이 강한 점도 특징이다.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도내 대학들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손잡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설립 2년 만에 세워진 기술연구소가 주도적으로 나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찾아내려는 주도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삼우아이엠씨만의 ‘킬러 아이템(Killer Item)’을 만들자는 목표는 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직원 모두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생존 전략”

### 김기현 대표이사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삼우아이엠씨는 2023년까지 건설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가진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들자는 비전을 세웠다. 엔지니어 출신인 김기현 대표이사(사진)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 대표는 “품질경영시



스템은 기업이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라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표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적자공사 수주를 금지하고 있다. 당장의 경

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체성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한 기술분위적인 사업개발과 승산의 결과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0년간 기술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기업, 직원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 도내 건설업계 '올림픽 특수' 끝났다

2018년 대규모 토목 공사 마무리  
매년 건설 수주 건수 감소세 심화  
지역 영세 업체 줄도산 가능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강원도내 건설현장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보여 건설 불황이 심화될 전망이다.

22일 강원도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

면 내년 연말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조성 공사가 모두 완료된다. 여기에 원주-강릉 복선전철도 내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도 내년에 개통된다.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도 2018년 모두 완료된다. 이에 앞서 2011년 시작된 제2영동고속도로는 착공 5년만에 최근 개통됐으며 5596억원 투입된 양양-속초고속도로도 최근 개통됐다. 이처럼 강원도내 대규모 토목

공사들이 완료됐거나 2018년에 모두 마무리된다.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이 남아 있지만 언제 착공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건설 수주 건수도 감소세다. 도내 건설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의 2013년 수주 건수는 2645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2151건으로 줄었다. 올 11월까지 공사 수주 건수는 1855건으로 올해 2000건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사 건수 감소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SOC예산 축소로 신규 공공공사 발주가 줄어든데 따

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도내에서는 부동산호황에 힘입어 민간부문에 건설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지만 내년부터 주택경기가 꺾일 것으로 보여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도 대폭 감소될 것이라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강원도와 시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원주시와 채움·더파크종합건설은 22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80억 규모 건설공사 지역 업체 배분

시-채움·더파크 양해각서 체결  
반곡동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립

원주시 반곡동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 중인 건축주 채움과 시공사 더파크 종합건설이 원주시의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통해 지역에 총 80억원의 공사 물량을 배분한다.

원주시는 22일 오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채움 임태빈 대표, 더파크종합건설 안명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대상 건축공사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3425㎡, 지하 6층 지상 13층으로 오피스텔 147호 및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된다.

한편 원주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일환으로 16층

이상 등 대형 건축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을 최근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있다. 정태욱

### 오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

원주시가 23일 오전 10시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허가에 따른 발생 비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추진 시한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며 미이행시 축사 폐쇄 및 사용 중지 등 규제조치된다. 정태욱

### 도 과장급 이하 99명 승진 심의

강원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과장급 이하 99명에 대한 승진을 심의, 의결했다. 과장급과 담당급 승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과장급 승진

△강희성 (DMZ평화지역담당) △김종숙 (관광정책담당) △박광용 (경제정책담당) △박대용 (홍보팀장) △박동주 (예산담당) △박중성 (의정담당) △이수연 (교육고시담당) △이시복 (세정담당) △전광표 (여성정책담당) △허윤 (경리담당) △황덕창 (방재정책담당) △박용재 (대중교통담당) △이광섭 (친환경농업담당) △이준희 (산림보호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황형호 (춘천속초철도추진단) △허병규 (건축담당) △권순배 (병리곤충연구담당) △김영수 (질병조사과장) △이태준 (역학조사과장) △최승봉 (대기평가과장)

#### ◇담당급 승진

△강대준 (투자유치1부) △김상래 (정보산업과) △김순남 (기획관실) △박춘원 (복지정책과) △안재환 (세정과) △유경진 (조직위) △유창균 (관광개발과) △이성운 (농업기반과) △이종천 (관광마케팅과) △이진기 (의사관실) △이창재 (총무행정관실) △장선규 (사회적경제과) △최석진 (조직위) △최영주 (관광개발과) △변승진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이학주 (교통과) △손원천 (유통유통예과) △양재용 (농업기반과) △채병문 (산림소득과) △이동희 (기획총괄과) △이효순 (보건정책과) △김범수 (도로철도과) △권성오 (시설관리과) △여영균 (균형발전과) △정원수 (도로철도과) △김동철 (건축과) △박영수 (춘천속초철도추진단) △권명순 (안전총괄과) △고재영 (월예연구과) △정태성 (환경농업연구과) △이순원 (미생물과) △임은주 (감역의학과) △오근찬 (대기평가과) △이건호 (수계조사과)

# “입찰담합 손해배상은 이중제재... 판결後 과징금 환급해야”

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에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제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과징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2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이우현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슈 토론회’에서 ‘발주기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건설사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

발주처 무분별한 청구 소송 ‘과잉·중복제재’ 개선 필요

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뒤따르는 것은 줄곧 이중제재 또는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이 낸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과징금을 통해 환

수한 부당이득 부분과 손해배상을 통해 환수된 부당이득 부분이 목적과 기능 면에서 중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환급해줌으로써 중복제재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급제도는 과거에도 시행했던 제도라는 점도 설명했다. 옛 공정거래법 제6조 제7항에서는 ‘과징금을 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약 16년간 지속했으나, 지난 1994년 12월 법

정을 통해 삭제됐다.

특히 처분청을 통해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도 경쟁제한금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환급의 방식과 범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는 환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둘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다. 셋째는 환급 한도를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상한선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토록 하는 방안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 ‘입찰담합 3진 아웃제’ 법안 처리 보류... 국토부 대안 제시

# ‘기간제한 없이 → 10년동안 3회 이상 과징금’ 조건 변경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입찰담합 3진 아웃제’가 업계 반대에 부딪치자, 최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부 법안 소위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6개 법안을 심의했다.

건설업계의 반대가 컸던 ‘입찰담합 3진 아웃제’와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는 처리가 보류됐다. 당초 이들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야당에서 지지하며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입찰담합 3진 아웃제’가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안(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에서 한 발 물러나 10년 동안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건설업계 등 관계

건설업계 등 입장 추가 수렴 후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기관의 입장을 더 듣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2월 임시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이 이날 종료된 만큼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 3진 아웃제’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입찰담합 처벌을 강화해 근절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위헌 소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경제 손실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정치 혼란, 세계경제 불안 등 최근 대내외 여건이 한국경제에 불리한 가운데, 이같이 부작용이 큰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

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등에 주요 철강재 등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들의 무효하는 것은 반시장적 규제이며 △공사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마찰 우려 △자재수급 불안 등 부작용만 크다는 입장을 폈다.

한상준기자 newspia@